경찰 "尹 체포영장, 공조본 체제로 집행"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하라' 공문 발송
경찰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법적 논란 있다"
공수처, 경찰 법리 검토 수용… "논란 남기면 안돼"
공조본, 기한 연장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안을 경찰이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법적 논란에 대해 오전에 공수처 측과 통화했다. 공수처가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로 넘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경찰이 재이첩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과의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된 만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수사준칙상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 지휘는 가능하지만, 경찰에 대한 영장지휘를 규정하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는 없다"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계속 주도하게 됐다.

이후, 공조본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영장은 반환했으며, 기한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 연장 시한은 7일이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 후 필요하다면 7일 이상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함께 공조본에 참여중인 경찰과 함께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청구 영장 발부시 공조본 체제에서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경호부대 일반병(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민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 재의결 예정

거부권 행사 8개 법안들 오늘 본회의서 재의결
9일 '여객기 참사' 등 주요 현안 질의 진행키로

여야가 6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오는 8일 일괄 재의결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본회의 일정이 협의됐다"며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오는 9일 내란, 경제 위기 문제, 항공 참사 등으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대행 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설치된 임도 지속 유지·관리체계 강화

〈林道〉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산림자원 관리 법 개정안도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 취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제19대 회장으로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에서 부회장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감사에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충북여성재단 유정미 대표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06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이 모여 창립, 현재 지역에서 16개 여성가족정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전정희 신임 회장은 지역 여성가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 회원기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4월 정례회의 개최, 6월 회원기관 공동 해외연수, 회장단 워크숍, 하반기 공동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정희 신임 회장은 "현재 지역은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정희 신임 회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2023년 출범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초대 원장이다.

/장은성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현장평가단 환영 인파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가 시작된 6일 새만금 33센터에서 평가단이 도착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도민들이 손을 흔들며 평가단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에 "편향적"

"여론조사 통해 여론 호도 시도 많아…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고발 논의"
尹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 "공조본 체제 진행이 적절… 엄정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당 법률위원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이라며 "질문부터 전개 과정을 보면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지율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항 설계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가 적절하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공조본 체제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인 것은 보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회 의결도 부정하는 행위들이 진정 보수주의자들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번씩이나 법원이 인정한 것도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곧 헌법재판소 판단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